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사회경제적 조절양식 연구

이승협 *

이 글은 1990년대 중반 슈투트가르트 지역에서 형성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경제의 위기에 대해 시장에 의한 경제의 복원이라는 경제주의적 방식이 아닌 정치의 복원과 자율적 시민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경제와 시장을 사회적으로 조절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슈투트가르트 사례에 주목한다.

이 글에서는 슈투트가르트모델의 특징과 구조를 지역경제의 조절양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산업경제의 조절주체인 국가(지방정부), 노동 및 자본의 역할과 기능을 행위자적 측면에서, 주체 간 협상과 조절연계의 방식으로 주체 간 네트워크의 작동방식과 작동수준을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분석의 결과, 슈투트가르트 모델은 시민사회 네트워크로 개념화될 수 있었다. 슈투트가르트 모델의 핵심은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지역 구성원들 사이에 새로운 협력관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주체로 등장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주정부가 지역경제의 시민적 조절에 개입을 자제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적 공간의 활동범위와 역할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적 조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그 만큼 독일 시민사회가 강력한 행위자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슈투트가르트 모델, 시민사회, 시민네트워크, 혁신연대, 사회적 조절

* 한국노동교육연구소원

1. 들어가는 말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시작된 시장의 폭주는 한편으로는 국가의 위축과 정치의 위기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를 사회발전의 새로운 주체로 재등장시켰다. 시민사회는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시장 관계가 아닌 시민의 일상적 생활의 장으로서,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자립적 사회구성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정치의 위기 이후 시장의 폭주에 대항하는 사회적 힘으로서 시민운동과 비정부기구(NGO) 및 비정치기구(NPO) 등이 시민사회의 핵심적 주체로 다양한 생활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출발한 시민사회운동은 기존의 자본과 노동의 대립관계 속에서 소외되어 온 여성, 환경, 생태, 주거, 아동,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내면서, 정치와 경제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적 공론장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시민운동은 다양한 주체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생활운동이라는 자율성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영역 내에 고립된 자기방어적 사회운동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더구나 기술발전과 사회적 복합성의 증대에 따른 시장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시민적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다층적이고 다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대응이 단편적이고 분산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세계화와 보편시장으로 요약되는 자본의 운동과 시장의 폭주가 시민의 일상적 생활세계를 침식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폭주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사회의 역동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1990년대 중반 슈투트가르트 지역에서 형성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경제의 위기에 대해 시장에 의한 경제의 복원이라는 경제주의적 방식이 아닌 정치의 복원과

자율적 시민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경제와 시장을 사회적으로 조절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슈투트가르트 사례에 주목하는 것이다.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의 과정에서 독일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지방자치와 분권적 연방제의 전통이 깊은 독일에서는 지역별로 도시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 신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 해외직접투자 유치, 기존 산업의 산업구조조정, 신산업단지의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의 해결방식이 시도되는 과정에서, 슈투트가르트 사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지역경제 혁신 모델로 주목받게 된다.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지역경제의 부활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혁신과정에서 구축된 자율적 시민네트워크의 형성과 시장에 대한 사회적 조절 가능성이다.

분석의 결과를 미리 요약하자면, 모델로서의 슈투트가르트 사례가 갖는 특징은 시민사회의 자율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 정당과 지역의회 등 정치의 적극적 지원, 그리고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경제 위기의 과정에서 보여준 슈투트가르트 모델이 보여준 시장에 대한 시민사회적 조절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슈투트가르트 모델이 등장하게 된 지역경제의 위기가 갖고 있는 성격을 보여준 위기의 성격을 독일의 라인형 자본주의가 기존에 갖고 있던 코포러티스트 조절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일국적 단위에서 노동과 자본에의 계급타협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조절방식으로 작동해왔던 코포러티즘이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게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슈투트가르트 모델은 시장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조절양식이 아니라 노사정 중심의 코포러티스트 조절양식에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중요한 사회적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시민사회적 조절양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제시된 시민사회 네트워크에 의한 사회적 조절양식의 구축과정, 구조 및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슈투트가르트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구성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에 대한 이론을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분열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3장에서는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사회경제적 조절의 배경으로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의 위기를 간략히 살펴보고,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구축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정치적 주체 및 경제적 주체와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4장에서는 시민사회 네트워크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조절의 의미와 평가를 구조와 주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위에서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슈투트가르트 모델이 갖는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사회경제 조절양식을 평가하고 그 함의를 이끌어낸다.

2. 분석틀과 문제 설정: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에 뒤이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확장은 시민사회(Civil Society)에 대한 이론적 및 실천적 관심을 가져왔다.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규범적 가치와 미래사회에 대한 기획을 내포하는 시대적 표상으로 작동해왔던 것처럼, 시민사회는 사회주의를 대체하여 새로운 시대적 표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그러나 맑스가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에서 정식화했던 삶의 물질적 조건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제적 관계로서의 시민사회(Bürgerliche Gesellschaft)가 아니다. 오히려 경제적 제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동시에 국가와 구별되는 별도의 영역으로서의 이데올로기, 가치, 규범 및 문화 등을 포괄하는 상부구조로 시민사회를 분석하는 그람시의 시민사회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보비오 1992, 137-165). 에드워즈가 구분하는 시민사회의 세 가지 이론적 입장, 즉 시민

사회의 분석적 모델, 규범적 모델 및 공공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는 모두 그람시의 시민사회론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에드워즈 2005). 이러한 전통 하에서 시민사회는 국가 및 시장과 구별되는 제3의 영역인 비영리(Non-profit) 또는 제3섹터(3rd sector)로 간주되거나, 시민적 가치의 규범적 원리가 작동하는 공동체 내지는 합의적 의사소통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공영역으로 정의된다.

상부구조의 영역에서의 시민적 자율성에 기초한 시민사회론의 확장과 더불어 사회운동의 주체와 대상에 있어서 근본적 전환이 이루어진다. 경제적 관계에 초점을 둔 맑스적인 의미의 시민사회의 복원은 경제적 관계 그 자체로부터 왜곡된 삶의 물질적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생산관계 내의 핵심적 관계로서 계급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해왔고, 그 실질적 운동의 주체를 노동자 및 노동운동으로 설정해왔다. 그러나 시민사회를 상부구조의 일부로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운동의 대상은 이데올로기, 규범, 가치 및 문화와 같은 상부구조의 영역으로 한정되었으며, 사회운동의 주체 역시 노동자 및 노동운동이 아니라 시민과 비권력적이고 비시장적인 사회적 결사체로 전환되었다. 1968년 유럽혁명을 거치면서 이러한 흐름은 신사회운동 또는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운동, 환경운동 및 소비자운동 등을 통합해갔다(Adloff 2005, 131-132).

그 결과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은 반국가 및 반시장 영역에서의 삶의 본원적 관계의 회복이라는 동일한 목적, 가치 및 규범을 추구하면서도 서로 분리되고 구별되는 심지어 대립적인 운동으로 발전한다. 서구 사회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분리와 대립은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녹색당으로의 좌파 정당의 분열에서 그 정점에 이르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시장에 의한 생활세계의 급격한 침식을 가져오고 있으며, 동시에 시장에 의한 국가의 도구화 역시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 시민권의 확대에 따른 서구 복지국가는 19세기 이후

노동운동과 20세기 후반 이후 시민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 복지국가는 조정되면서 시장의 전제는 심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의 전제에 맞서 삶의 영역으로서의 생활세계를 복원해갈 사회적 힘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 글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으로의 사회운동의 재통합과 사회운동의 물질적 제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에서 그 답을 구한다. 맑스나 그람시의 시민사회는 각각 토대와 상부구조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전체 사회 구성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자본주의적 시장의 확장은 단순히 상품의 생산과 소비라는 자본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 여성, 여가, 교육, 가정 등 삶의 모든 영역을 자본의 영역으로 전일화해가고 있다. 따라서 소외된 노동의 복원과 시민적 자율성의 확보는 모든 생활세계의 영역으로 침투해오는 자본의 총체성에 대항하는 사회적 조절의 가능여부에 달려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사례는 현실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국가를 매개로 어떻게 경제적 제관계를 조정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코포러티즘의 전통이 깊은 독일 사회에서 지역경제의 위기에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결합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역공동체 내에서 경제위기의 극복과 더불어 시민적 자율성에 기초한 공동체를 구축해가는 과정은 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에 대한 대립적 관점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극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코포러티즘과 시민사회네트워크의 구축

1) 경제위기의 성격과 사회경제적 조정

유럽의 미래 성장축(Dunford & Kafkalas 1992, 25)으로 주목받던 슈투트가르트 지역¹⁾은 1991년부터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1991-1993년 사이 제조업의 수출감소율은 5%에 달하게 되고, 제조업 투자는 31%가 줄어들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새로운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1992년에서 1996년 사이에만 약 11만 명의 신규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4%대의 완전고용에 가깝던 실업률은 90년대 중반에 이르면 9%를 넘어서게 된다(Gaebel 1997, 16-17; Hahn 1997). 경제위기는 곧 지역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사회적 위기로 확대된다(Dietmar 2003). 경제위기 이후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고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2년 140여만 명에서 1995년 134만 명으로 저점에 이르게 된다(표 1).

〈표 1〉 슈투트가르트지역 고용변화 1992-2002

지역 \ 년도	1992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슈투트가르트	469.650	442.434	436.541	437.974	441.039	440.658	432.081	455.963	457.823	458.815
비블링엔	185.009	177.504	176.646	177.981	181.531	183.454	187.571	195.763	202.726	205.038
에스링엔	241.075	231.056	230.361	232.098	234.091	238.582	236.818	241.420	245.218	243.069
괴핑엔	116.262	112.209	112.243	112.718	110.966	110.459	109.613	110.029	110.472	110.002
루드비히스부 르크	219.499	212.772	211.326	212.168	204.529	217.468	215.558	221.022	224.839	226.921
렘스-무어	177.484	173.308	173.673	171.658	173.511	174.052	176.513	177.941	180.359	180.261
슈투트가르트 지역	1.408.979	1.349.283	1.340.790	1.344.597	1.345.667	1.364.673	1.358.154	1.402.138	1.421.437	1.424.106

출처: IHK (2004).

1) 슈투트가르트 지역은 대기업-중소기업관의 원·하청 관계, 지역적 산학협동, 지방정부의 지원 하에서 높은 성장세를 구가해하여 유럽의 미래성장축으로 평가받아왔다.

바덴-뷔르템베르크²⁾의 핵심적 산업생산지이며, 독일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산업지구(Gaebel 1997, 11-12)인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는 경제위기 전인 1990년대 초에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면적에서는 1/10수준이지만, 생산 및 고용에 있어서는 약 30%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가 급격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된 이유로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우선 첫째로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의 높은 대외의존성을 들 수 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활동하는 주요 기업은 벤쯔, 포르쉐 및 보쉬와 같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다국적기업들이다.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전지구적 시장경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쉬운 산업구조를 갖고 있었다. 지역경제의 핵심인 자동차산업이 90년대 중반부터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둘째로는, 슈투트가르트 지역은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기계 및 전자산업이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Rehfeld 1999, 63). 따라서 내적인 높은 산업연관성으로 인해 핵심기업의 위기가 관련 부품업체 및 인접 산업으로 확산되어 지역경제 전체의 위기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1년의 지역경제위기는 자동차산업을 거쳐 기계 및 전자산업으로 확산되었다.

셋째로는 자동차, 기계 및 전자 중심의 단종적(monoculture) 산업구조를 들 수 있다. 지역경제의 대부분이 금속산업, 특히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특정 산업의 위기가 곧바로 지역경제의 위기로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경제위기를 이베어와 디스판은 성장의 위기와 위기의 일상화(Krise als Normalität)라고 규정한다(Iwer, Dispan et al. 2002,

²⁾ 바덴-뷔르템베르크는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기, 전자, 기계 및 자동차 관련업종이 발달해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이다.

7-9). 이와 같은 위기의 구조적 성격으로 인해,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경제부양과 경제정책의 재조정이 아니라 산업입지로서의 지역경제공동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경제위기가 고용위기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의 문제가 지역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면서,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산업입지를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는 단순한 경제정책의 재조정을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이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고용과 성장의 디커플링으로 인해 고용문제를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제기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도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산업입지적인 측면에서 지역경제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방정부 및 지역경제의 시장주체들에 의한 시장조절로서는 한계가 존재했다. 우선 지역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고용, 임금, 노동시간 및 숙련형성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사회적 대화 및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동시에 단종적이고 해외시장의존적인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은 도로, 철도 등 교통, 주거 및 환경 등에 대해 시민사회와의 사회적 대화를 거쳐야만 했다. 따라서 국가가 지역경제 주체의 이해관계를 경제정책이라는 정치적 행위로서 일방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컸다고 볼 수 있다.

2) 대항권력에서 참여권력으로: 노동조합의 전략변화와 사회코포러티즘의 재구축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구축과정에서 핵심적인 행위자로 등장한 것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금속노조 지부였다.³⁾ 독일은 90년대 중반 “일자리를 위한 동

3) 바덴-뷔르템베르크 금속노조 지부는 금속 및 전자산업을 포괄하고 있으며, 약 50만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는 금속노조 내에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지역지부이다.

맹(Bündnis für Arbeit)”이란 이름으로 거시경제적인 사회적 대화를 시도했으나 노사정 사이의 이견으로 실패한 바 있다(이승협 2004). 그러나 전국 단위의 거시적 사회코포러티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지역과 기업단위에서 미시 또는 중범위적 사회코포러티즘을 재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시도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금속노조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지부가 있는 슈투트가르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자본에 대항하는 사회적 대항권력으로 스스로를 정의한다. 즉 국가, 자본 및 노동이라는 사회적 권력의 한 축으로서 자본에 대항하여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동시에 자본에 대한 사회적 감시 및 견제기능을 수행해왔다. 독일의 대표적 노동조합인 금속노조도 이러한 반자본 대항권력을 자신의 기본적 입장으로 삼아왔다(이승협 2006). 이러한 모델은 일반적으로 갈등적 파트너십(Konfliktive Partnerschaft)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지역경제 및 고용위기가 심각해져가자 금속노조 바덴-뷔르템베르크 지부는 지부장인 발터 리스터(Walter Riestler)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전략을 대항권력에서 참여권력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참여권력이란 국가와 자본의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시장을 조절하는 행위자로서 참여하는 참여적 파트너십을 말한다.

금속노조 슈투트가르트지부는 참여권력으로의 전환을 통해 “혁신연대”에 기초한 지역단위의 사회적 코포러티즘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추구한다. 그 기본 목적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있었다(Töpsch & Malanowski 2000, 45-56). 노동자 고용위기의 핵심인 기업의 구조조정을 수량적 유연성의 확보에서 기능적 유연성의 확보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숙련형성과 기업의 조직 및 기술혁신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노동조합의 주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가 참여권력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이른바 노동조합의 구조정책 (Strukturpolitik)이

란 시장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조절의 필요성을 혁신연대의 틀 내에서 사회코포러티즘적인 지역단위의 사회적 대화로 재구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Töpsch & Malanowski 2000, 50-56).

따라서 슈투트가르트 금속노조 지부가 내세우는 구조정책의 핵심에는 대안적 산업정책이 놓여져 있다. 대안적 산업정책은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작업장 혁신과 중범위 수준인 지역 및 산업단위에서의 숙련강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Heinze & Schmid 1994; Kern 1994). 슈투트가르트 금속노조는 숙련형성과 작업장 혁신을 단체교섭의 주요 의제로 삼아, 벤쯔, 보쉬, 독일IBM 등의 주요 기업들에서 숙련형성을 위한 협약, 노동시간의 유연한 활용, 노동시간계좌제 등 노동력 판매의 질적 조건을 중심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을 재구성해간다. 슈투트가르트 금속노조 지부의 적극적인 공세에 사용자단체도 고용조정이 아닌 작업장 혁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용자의 대안적 전략을 “출발 2000”의 형태로 제시하고 된다(VDW/VDM/IG Metall 1994).

중범위 수준에서의 혁신연대의 형성은 미시적 수준인 작업장에서의 혁신연대로 연결되었다. 산업과 기업수준에서 노동조합, 주정부, 사용자 단체 사이의 혁신연대는 지역의 경제 환경의 정비, 기업의 조직 및 기술혁신 노력, 그리고 정리해고의 자제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안정을 그 내용으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메조-코포러티즘적 조절은 작업장에서의 미시적 작업장 혁신연대로 이어졌다.

3)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사회코포러티즘의 확장

사회코포러티즘의 재조정을 통해 노동과 자본에 의한 혁신연대가 형성되고, 여기에 국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함으로써 노사정민에 기초한 사회코포러티즘이 확장된다. 이전의 코포러티스트 조절이 노사정 사이에서 이루

어진 고용과 임금의 교환을 통한 생산성연대였다면 슈투트가르트 모델의 코포러티스트 조절은 생산성연대에 대한 시민사회적 조절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노동조합으로부터 시작된 지역 단위의 사회코포러티즘의 재구축을 위한 노력이 국가와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확대되어갔다고 볼 수 있다.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 정부가 당시 제시한 “대화지향 경제정책”이란 시장에 대한 사회코포러티즘적 조절을 지방정부의 핵심적 내용으로 삼아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는 지역경제위기가 시작된 1992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의 구축을 제안하게 되고, 여기에 경제단체 및 지역의 사회문화단체들이 호응하여 지역회의(Regionalkonferenz)가 소집된다. 여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그 중 일부는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조직으로 구체화된다. 지역회의 결과 노사정을 넘어 시민사회 단체들 사회코포러티즘에 포섭되게 된다. “슈투트가르트 근거리교통 협회(Zweckverbands Nahverkehr Region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지역 관광 및 홍보협회(Region Stuttgart Marketing- und Tourismus GmbH)”, “문화지역 슈투트가르트(KulturRegion Stuttgart)” 등 다양한 시민조직들이 시민사회 네트워크로 연결되게 되어, 지역공동체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의 조절방안들이 논의되고 정책화되어 실시되게 된다.

주정부는 슈투트가르트 지역협력강화를 위한 법 (Gesetz zur Stärkung der Zusammenarbeit in der Region Stuttgart)을 제정하여, 사회적 코포러티즘과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제도화를 도모한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슈투트가르트 지역협회는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시민단체들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률제정으로 슈투트가르트 지역협회가 공공적 제도성을 획득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시민조직과 시민네트워크가 지역공동체의 사회경제적 환경

과 발전방향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해갈 수 있는 토대로 작용했다.

슈투트가르트 지역협회는 시민의회의 형태로 공동체의 생활영역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영역을 공공영역으로 재구축해나갔다. 정치적 및 시장적 논리가 시민사회의 공동체적 논리에 의해 제한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교통, 도로, 문화, 교육, 관광, 투자, 도시계획 등의 다양한 의제들을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정책화시키는 핵심적인 공론장이 기능하게 되었다(Verband Region Stuttgart 2002).⁴⁾

슈투트가르트 지역협회(Verband Region Stuttgart)는 결성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간다. 슈투트가르트 지역협회는 유럽연합과 정부의 지역발전 지원사업을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러한 재원을 통해 지역상공인, 기업 사용자,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를 하나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확장해간다.

슈투트가르트 지역협회는 1995년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경제적 조절을 위해 1995년에 주도적으로 슈투트가르트 경제육성회(Wirtschaftsförderung Region Stuttgart, WRS)를 설립한다. 슈투트가르트 경제육성회는 일종의 지역 노사정 경제협력체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금속산별노조, 독일노총, 상공회의소, 정계, 관계, 학계 등 지역경제의 담당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경제육성회는 공개적으로 민간-공공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포방하고 있다(IHK 2002, 45-46). 슈투트가르트 경제육성회는 슈투트가르트 경제육성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통해 지역의 산업입지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4) 슈투트가르트 지역협회는 자율적 지역시민의회의 형태를 띠고 있다. 지역시민의회의 성원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87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에 의해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된 사안을 실행하게 된다. 슈투트가르트 지역협회는 5년마다 지역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지역경제에 대한 독립적인 정책적 의결권한을 가진다(Verband Region Stuttgart 2004).

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⁵⁾

기존의 경제위기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은 경제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기업의 투자여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직접적 지원과 임금부대 비용 및 조세를 낮춰주는 간접적 지원방식 등 주로 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업자체의 기술 및 조직혁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슈투트가르트 모델은 지역산업 활성화의 주체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동시에 시민사회가 다양한 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특징을 갖는다. 슈투트가르트 지역혁신 네트워크는 크게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생산자공동체 네트워크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생산자공동체 네트워크의 경우 기업과 더불어 노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 슈투트가르트 모델의 사회적 조절과 시민사회 네트워크

심각한 산업 및 경제위기에 직면했던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는 2000년대 이후 다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인다. 슈투트가르트의 지역경제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새로운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으로 등장하게 된다.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독일 평균인 2% 보다 훨씬 높은 4%에 이르고 있다. 실업률 또한 독일 평균인 10%의 절반 수준인 5%로 정도로 경제위기 이전의 고용활력을 갖게

⁵⁾ 슈투트가르트 경제육성회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핵심적 매개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적 활동에 대한 시민사회적 조절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며, 따라서 산업 및 경제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혁신연대에 기초한 작업장 혁신, 조직혁신, 고용정책적 조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지역고용기구(Regionale Beschäftigungsagentur)의 설립도 고용정책에 대한 사회적 조절의 일부로 볼 수 있다(Iwer, Dispan et al. 2002, 10).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업종별 고용증가율을 90년대 중반 이전(1989-1994)과 이후(1994-1999)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고용증가율이 구서독지역 전체와 비교해 볼 때 현격하게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Dietmar 2003). 또한 90년대 중반 이후 기업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고임금과 높은 임금부대비율, 높은 조세부담률을 불평하던 기업들도 90%에 육박하는 산업입지에 대한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했던 슈투트가르트 지역에서는 1995년에서 200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또한, 전통적인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와 서비스산업의 저발달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던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던 지역경제의 시민사회적 조절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의 사회적 조절의 핵심적 주체인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조절양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존에 주로 전국 수준에서 이루어졌던 거시적 사회코포러티즘이 지역과 기업 수준으로 분권화되어 진행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중요한 주도적 행위자로 등장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코포러티스트 조절이 노사정 삼자주의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반해서, 슈투트가르트의 제조-코포러티즘은 노사정민으로 코포러티즘의 주체가 확대되고, 동시에 다양한 시민단체와 NGO가 시민사회의 주체로서 지역경제에 대한 사회적 조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사회적 조절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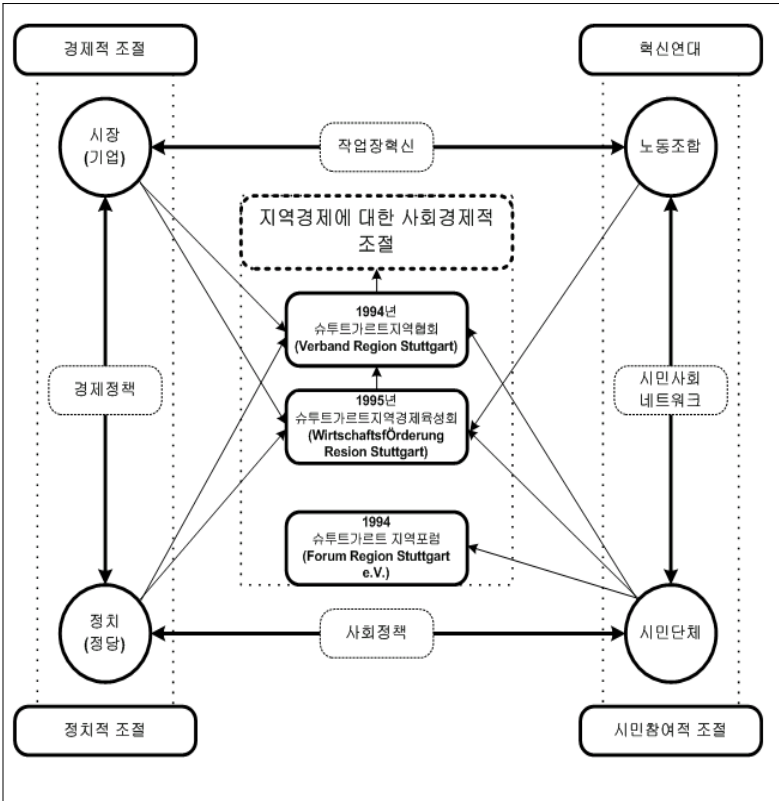
독일 슈투트가르트 모델이 주는 함의는 산업의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쇠퇴를 지역공동체의 시장적 조절이 아닌 시민사회적 조절을 통해 극복해 냈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기업의 조직적 기술적 혁신, 정부의 산업

및 경제정책 등의 경제적 논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전체이익과 사적 기업의 개별적 이익이 조절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조절양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기업, 노조, 시민사회의 지역네트워크의 구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제도적 틀을 통해 시도해갈 수 있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지역경제의 조절주체로서의 참여는 기존의 코포러티즘적 조절과 조절의 주체의 재편을 의미한다. 노사정 3자주의에 기초한 코포러티즘적 조절모델에서 노사정민이라는 4자주의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기존 코포러티즘의 중요한 주체로서의 노동과 자본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개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슈투트가르트 모델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적 조절, 시민참여적 조절, 작업장 혁신이라는 3가지 역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3가지 영역에서의 조절은 독일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가 내세우는 공동체성이 경제사회적 조절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슈투트가르트 시민네트워크의 조절구조



시장과 국가는 전통적으로 경제정책을 매개로 상호관계를 맺어왔다. 지방정부와 지자체는 정치적 행위의 주체로서 시장에 개입하여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물질적 생산활동의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실패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해왔다. 특히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국가의 적극적 시장개입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세계화라는 변화된 환경 하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시장과 국가 사이

의 관계는 국가의 시장개입의 축소라는 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해외시장 의존적인 수출주도형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의 구조적 특성상 시장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 감소는 더욱 더 두드러졌다. 그 결과 국가는 정치적 행위를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 개입에서 시민사회적 조절을 통한 시장개입으로 전략적 변화를 도모한다. 슈투트가르트 지역협회는 바로 이러한 지역 정치주체의 전략변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Verband Region Stuttgart 2002).

시장의 주체인 지역경제인과 사용자들도 기업 간 경쟁이 전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경제환경 하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입지의 구축을 위해서는 작업장 내부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의 하부구조를 생산체인의 일부로 통합해낼 필요성이 존재했다. 90년대 이후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확산된 유연생산체제는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원하청 및 소비시장을 하나로 묶는 체계적 합리화(Systemische Rationalisierung)로 발전되어 왔다(Altmann 1989). 따라서 한편으로는 민간-공공 파트너십과 더불어 노동조합과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을 필요로 했다.

노동조합은 기업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 내에 존재하는 비시장적 제도이다. 노동력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는 시장의 차가운 관점에 대항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민사회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 내에 존재하는 자본에 대한 대항권력으로 노동자들의 경제적 시민권의 확보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슈투트가르트 사례는 노동조합이 반권력에서 참여권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금속노조 지역지부는 작업장 내부에서는 자본과의 혁신연대를 통해 고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고, 작업장 외부에서는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연대하여 지역경제의 사회경제적 조절의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Töpsch & Malanowski 2000, 50-56).

시민사회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정치 및 비영리 시민조직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슈투트가르트 지역포럼을 구성하여 슈투트가르트지역의 사회경제적 조절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전의 시민사회 및 시민운동의 활동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자율적 생활세계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슈투트가르트 사례에서 나타나는 시민사회 및 시민운동의 특징은 자신의 생활세계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의 조절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이다(Iwer, Dispan et al. 2002). 더불어 이전에는 분리된 또는 대립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지역공동체를 시장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공동체적 관점에서 조정해가고 있다. 지역고용기구에 대한 참여, 지역 교통체계의 전반적 재조정을 위한 협의, 지역 문화시설과 생활환경의 정비 등 생활세계의 다양한 영역에 시민적 관점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조정을 주도해가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전국 단위에서 추진되던 거시경제적 수준에서의 코포러티즘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사회코포러티즘의 전통이 여전히 지역의 수준에서는 중요한 사회적 질서원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정부에 의한 정치적 조절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정치의 영역으로 한정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 조절능력을 활성화시켜 지역공동체의 삶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간접적 주체로 한정하는 국가의 자기역할에 대한 제한은 결국 독일 사회구조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맺음말: 한국에의 함의

이 글에서는 시장에 대한 사회적 조절의 사례로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시민사회적 조절모형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슈투트가르트 사례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일까? 우리와는 달리 시민사회의 역사적 형성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제도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다원주의적 이해대변의 구조가 정착되어 있는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슈투트가르트 모델이 주는 함의는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지역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된 새로운 협력관계’가 사회경제적 조절의 주체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시민사회와 이에 기초한 시민운동은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시장적이고 비국가적인 자율적 결사체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가 갖는 한계는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영역을 생산의 영역 외부로 한정한다는 점이다.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자본주의적 시장관계는 전통적인 생산의 영역을 넘어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을 시장논리로 포섭해가고 있다. 소비활동, 여가활동, 스포츠, 문화활동, 가정생활, 교육 및 의료 등 모든 생활세계는 상품화되어가고 있다. 브레이버만은 이러한 시장의 전면화를 보편시장(Universal market)의 형성이라고 규정한다(Braverman 1977). 즉 더 이상 시장의 영역, 국가의 영역 및 시민사회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의 전제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자율적 공공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운동이 시장과 국가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슈투트가르트 사례는 시민사회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사회경제적 조절이라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노동사회 및 노동운동과 결합하여 물질적 생산관계와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에 동시에 개입해야만 시민사회의 사회경제적 조절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슈투트가르트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사회와 노동,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분리가 1990년대 이후 심화되고 고착화되고 있다. 시민운동을 부르주아적 운동으

로 치부하거나 노동 및 노동운동을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배제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상호배제적 운동으로 분리되면서, 자율적 생활공간으로서의 공동체가 시장논리와 국가의 관료적 통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사례는 생산현장의 비시장적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이 기업의 시장논리에 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사회경제적 조절을 위한 민간조직 내에서의 노동조합과의 연대를 통해 시장의 일방적인 식민화를 제어하는 자율적 공공영역을 능동적으로 구축해가고 있다.

셋째로, 경제논리에 따른 경제위기의 극복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일자리 상실로 이어져 실업자로 전락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악화시키고 공동체적 삶의 물적 토대를 약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이기적인 합리적 경제행위는 전체 지역경제의 악화와 지역공동체의 해체라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슈투트가르트 모델이 보여준 바처럼 경제논리에 대해 사회적 개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단순히 기업경제의 활성화가 아니라 전체 지역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보비오, 노르베르트. 199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서울: 문학과 지성사.
 에드워즈, 마이클. 2005. 『시민사회』. 서울: 동아시아.
 이문호. 2002.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의 혁신모델: 참여적 조절” 배규한, 한준, 김우식 외. 『변화하는 사회환경 기업의 대응』. 서울: 지식마당.
 이승협. 2004. “독일 일자리를 위한 연대의 실패와 그 원인.” 『현장에서 미래

를』 . 04/2호.

- 이승협. 2006. “독일 단체교섭체제의 구조와 변화.” 『산업노동연구』 . 12(2). 203-234.
- 주성수. 2006. 『한국시민사회지표』 , 서울: 아르케.
- Adloff, Frank. 2005. *Zivilgesellschaft. Theorie und politische Praxis*. Ffm.
- Altmann, Norbert/ Sauer, Dieter. 1989. *Systemische Rationalisierung und Zulieferindustrie. Sozialwissenschaftliche Aspekte zwischenbetrieblicher Arbeitsteilung*. Ffm: N.Y.
- Antoni, Conny Herbert. 1990. *Qualitätszirkel als Modell partizipativer Gruppenarbeit. Analyse der Möglichkeiten und Grenzen aus der Sicht betroffener Mitarbeiter*. Bern, Stuttgart, Toronto.
- Antoni, Conny Herbert. 1992. “Meister im Wandel. Zur veränderten Rolle des Meisters bei der Einführung von Gruppenarbeit.” in *Angewandte Arbeitswissenschaft*, Nr. 134. 32-56.
- Antoni, Conny Herbert. 1995. “Gruppenarbeits-Konzepte im Rahmen von Lean Management. Erfragungen und Konsequenzen für die Einführung.” in Walter Bungard (ed.). *Lean Management auf dem Prüfstand*. Weinheim. 93-112.
- Braverman, Harry. 1977. *Die Arbeit im modernen Produktionsprozeß*. Ffm.
- Braun-Thürmann, Holger. 2005. *Innovation. Bielefeld*.
- Dathe, Dietmar. 2003. “Beschäftigungsstruktur und Beschäftigungsdynamik in Baden-Württemberg und ausgewählten Regionen seit 1989.” *Arbeitsbericht*. Nr. 241. Stuttgart.
- Deckarm, Manfred/ Brachat-Schwarz, Werner. 1997. “Beschäftigungsentwicklung in der Region Stuttgart. Eine regionalestatische Betrachtung der Entwicklung von Beschäftigung, Erwerbstätigkeit und Arbeitsmarkt.” in Wolf Gaebe (ed.). *Struktur und Dynamik in der Region Stuttgart*. Stuttgart.
- Dispan, Jürgen. 2003. “Regionale Strukturen und Beschäftigungsperspektiven im Handwerk.” *Informationsdienst des IMU-Instituts*. No. 4.

- Dunford, Mick/ Kafkalas, Grigoris. 1992. "The global-local interplay, corporate geographies and spatial development strategies in Europe." in Mick Dunford & Grigoris Kafkalas (eds.).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Europe*. London.
- Fricke, Werner. 1975. *Arbeitsorganisation und Qualifikation. Ein industriesoziologischer Beitrag zur Humanisierung der Arbeit*. Bad Godesberg.
- Gaebe, Wolf. 1997. "Stärken und Schwächen der Region Stuttgart im interregionalen Vergleich." in Wolf Gaebe (ed.). *Struktur und Dynamik in der Region Stuttgart*. Stuttgart.
- Gutowski, Achim. 1999. *Innovation als Schlüsselfaktor eines erfolgreichen Wirtschaftsstandortes - nationale und regionale Innovationsysteme im globalen Wettbewerb*. Bremen.
- Hahn, Roland. 1997. "Deindustrialisierungsprozesse in der Region Stuttgart? Ein Beitrag zur Diskussion um den aktuellen Strukturwandel." in Wolf Gaebe (ed.). *Struktur und Dynamik in der Region Stuttgart*. Stuttgart.
- Heinze, Rolf/ Schmid, Josef. 1994). "Mesokorporatistische Strategien im Vergleich. Industrielle Strukturwandel und die Kontingenz politischer Steuerung in drei Bundesländern." in Wolfgang Streeck (ed.). *Staat und Verbände*. Opladen.
- Helbrecht, Ilse. 2005. "Stadt- und Regionalmarketing: Neue Identitätspolitik in alten Grenzen." in Christian Scholz (ed.). *Strategie- und Informationsmanagement. Mering*.
- IHK. 2004. *Statistik 2004*. Stuttgart.
- IHK. 2002. *Die Wirtschaftsregion Stuttgart: Strukturen und Potenziale*. Stuttgart.
- ISS Frankfurt a. M. 2003. *Sozialstrukturbericht für die Region Stuttgart*. Stuttgart.
- Iwer, Frank/ Dispan, Jürgen/ Grammel, Ralf/ Stieler, Sylvia. 2002. *Strukturwandel und regional Kooperation. Arbeitsorientiertes Strukturpolitik in der Region Stuttgart*. Marburg.
- Kern, Horst. 1994. "Intelligente Regulierung. Gewerkschaftliche Beiträge in Ost und West zur Erneuerung des deutschen Produktionsmodells." *Soziale Welt*.

45. 33-59.

- Kinkel, Steffen/ Jung Erceg, Petra/ Lay, Gunter. 2002. "Auslandsproduktion - Chance oder Risiko für den Produktionsstandort Deutschland? Stand, Entwicklung und Effekte von Produktionsverlagerungen im Verarbeitenden Gewerbe." in *Mitteilungen aus der Nummer Produktionsinnovationserhebung*. No. 26.
- Kolarczyk, Vera/ Siller, Sven. 2002. *Die Daimler-Chrysler AG und der Standort Region Stuttgart, Projektarbeit am Institut für Grundlagen der Planung, Fakultät Architektur und Stadtplanung*. Universität Stuttgart.
- Kremer, Uwe. 1994. "Beteiligung an der regionalisierten Strukturpolitik in NRW, in: Hansürgen-Daheim." in Karl Krahn & Renate Schneider (eds.). *Standortfaktor Industrielle Beziehungen. Abkehr von den traditionellen Arrangements?* Mering.
- Magdowski, Thomas. 1997. "Die Dynamik der Arbeitsmarktregion Stuttgart." in Wolf Gaebe (ed.). *Struktur und Dynamik in der Region Stuttgart*. Stuttgart.
- Minssen, Heiner. 1999. "Direkte Partizipation contra Mitbestimmung? Herausforderung durch diskursive Koordinierung." in Müller-Jentsch, Walther (ed.). *Konfliktpartnerschaft. Akteure und Institutionen der industriellen Beziehungen*. München/ Mering. 129-156.
- Rehfeld, Dieter. 1999. *Produktionscluster*. Mering.
- Rehfeld, Dieter. 2006. "Wirtschaftsförderung - Steuerungsinstrument, Dienstleistung und immer wieder: Die Hoffnung auf den Jackpot. Überlegungen am Beispiel des Clustermanagements." in Stefan Gärtner/ Judith Terstiep/ Brigitta Widmaier (eds.). *Wirtschaftsförderung im Umbruch*. Mering.
- Roth, Siegfried. 1996. "Wiederentdeckung der eigenen Stärke? Lean Production-Konzepte in der deutschen Autoindustrie." in Leo Kißler (ed.). *Toyotismus in Europa. Schlanke Produktion und Gruppenarbeit in der deutschen und französischen Automobilindustrie*. Ffm/ N.Y. 109-140.

- Steigerwald, Heinrich J. 1989. *Quality Circles: Instrument zur Förderung von Produktivität, Innovation und Arbeitszufriedenheit*. Köln.
- Töpsch, Karin/ Malanowski, Norbert. 2000. “Arbeitsregulation im Modernisierungsprozess. Neue Herausforderungen für Verbände und Gewerkschaften in Baden-Württemberg.” *Akademie für Technikfolgendabschätzung in Baden-Württemberg, Arbeitsbericht*. No. 175.
- Verband Region Stuttgart. 2002a. *Facts and figures*. Stuttgart: Verband Region Stuttgart.
- Verband Region Stuttgart. 2002b. *Arbeitsbilanz des Verbands Region Stuttgart*. Stuttgart: Verband Region Stuttgart.
- Verband Region Stuttgart. 2003. *Beteiligungsbericht 2003 des Verbands Region Stuttgart 2004-2009*. Stuttgart.
- Verband Region Stuttgart. 2004. *Beteiligungshandbuch des Verbands Region Stuttgart 2004-2009*. Stuttgart.
- VDW/VDMA/IG Metall. 1994. *Gruppenarbeit. Chancen für den Maschinenbau*. Stuttgart.

A Study on the Socio-economic Mode of Regulation by the
Civil Society Network in Stuttgart

Seung-Hyeob Lee

This paper have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the Stuttgarter Model as a regulation mode of regional economy. For this purpose,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regional state government, labour and capital was analysed as a main actors of the regional industrial economy.

And also the functioning mode and level of the network between the actors have examined to search the social dialog and linkage by regulation between the main actors of the network. He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ttgarter model was conceptualized by civil society network and then its structure and main features was analysed.

The Stuttgarter case was known as a model that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by the reorganizing the regional economy. In that process, a new relationship for cooperation between the regional main actors including the civil society was highlighted as a major drive against the economic crisis.

The meaning of the german stuttgart model is that the region have overcome the declining regional economy, not through the market regulation, but through the regulation by civil society. The region have coordinated the individual interests of private enterprises and the community interests. It provides a new model for the social regulation over the economic crisi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rade unions and the civil

society, not simply by the economic logic as organizational, technological innovation, industrial and economic policy of the regional government.

Key words: Stuttgart Model, Civil Society, Civil Network, Solidarity for Innovation, social regulation.